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5.25)

□ 배경 및 목적

- 국제화, 지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롭게 변해가는 농업현장을 직접 살펴보고,
- 나아가 농정현안과 미래농업,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농민과 지역여론지도자, 생산자조직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의성있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.

□ 일시 및 장소

- 한우산업 토론회
 - 일시: 2009. 5. 22(금) 10:00~13:00
 - 장소: 강원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
 - 참석자: 박성재 부원장, 김병률, 허 덕, 우병준, 전상곤, 허정희(연구원),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, 늘푸름홍천한우클러스터사업단 이종현 단장, 총무, 지부장, 홍천한우협회장, 변해동 KREI리포터, 군청 담당자 등 현지 10여명
- 대관령 토론회
 - 일시: 2009. 5. 22(금) 15:00~18:30
 - 장소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원협
 - 참석자: 오세익 원장, 김병률, 박시현, 이용선, 전상곤, 허정희(연구원),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, 대관령원협조합장, 전무, 상무, 이사, 조합원 농민들, 목창군 백두대간 대표, 군의원, 고랭지시험장 등 30여명

□ 주요 토론내용

1) 용천군 안우산업 토론회

○ 한우 산지와 가락시장 공판장(도축장) 간 예약출하체계 구축

- 현재 가락시장 도축장과 산지 간 계획적인 예약출하시스템이 없음. 과거에 출하실적별 출하쿼터제를 시행하여 예약출하가 이루어졌으나 출하두수가 줄어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음.
- 가락시장 도축장에서 처리가능한 두수 이상으로 소가 출하될 경우, 소를 운반트럭에 실은 채 사료나 물 공급 없이 도축장 인근에서 최소 1~2일, 명절 때 1주일씩 대기.
- 한우 운송업자들은 대기 시간도 운송료를 받을 수 있어 예약출하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
- 수일간 대기로 인해 근출혈로 인한 가격손실이 빈번하며(두당 100~150만원 손실), 심한 경우 대기 소가 쓰러지는 경우까지 발생(작년 추석 때 1주일 대기로 소가 쓰러져 800만원 소가 300만원으로 급락).
- 도축 지연으로 인한 소 품질 하락의 책임소재가 농가, 운송기사, 도축장 사이에 불분명하여 모든 손실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.
-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출하예약제 등 계획적인 출하방식이 필요함. 아울러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출혈 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

○ 농협사료가격, 곡물가격 하락에도 사료값 인하 적어 불만(Asymetry)

- 국제곡물가격이나 환율 상승 시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즉각 반응하여 올라가지만, 반대인 경우 가격인하 속도 둔화로 농가불만.
- 최근 일반회사 사료값은 포당 1,400원 내렸으나 농협 사료는 300원만 내려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.
- 지역 축협의 마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, 결국 중앙회 사료 공장 공급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.
- 한우 브랜드사업의 브랜드화 조건(혈통, 사료, 지역 등 3통일 조건) 중 사료 통일을 위해 현재 사료회사 통일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프로그램 통일(성분)이 중요함.

○ 가격 등락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농가의 혼선을 초래

- 소값 등락, 특히 상승 시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다산장려금, 입식 자금, 생축장 지원 등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혼선 초래
- 단기적인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기보다 소값은 시장자율기능에 맞기고 정부는 직불제 등에 집중하여 정책일관성 유지 필요

○ 유통 과정 국가가 책임·관리, 농가는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

-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 및 품질 문제는 전적으로 농가의 책임임.
- 출하 이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의 문제까지 농가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음.
-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주면 농가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을 것임.

○ 기관간 데이터 베이스 공유 필요

- 한우생산이력제 등을 위해 소에 대한 각종 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짐.
- 시행하는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조사가 중복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.
- DB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여 중복 조사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
○ 기타

- 한우생산이력제 이표 부착 방식 개선 요구: 현재 두당 1개씩인데 2개씩 부착 필요. 두수 많은 경우 이표가 2기 이상 떨어지면 DNA 검사해야만 확인 가능
- 암소 브랜드화 긍정 검토 요망

2) 평창군 대관령농업 경종일반 토론회

○ 젊은 후계인력 육성대책 강화 필요

- 고령화 시대에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인력이 농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규모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
- 농지은행제도에 의한 임차경영 활성화 필요. 경자유전원칙은 옛말에 지나지 않음.
- 한국농업대학 출신들에 대한 네트워크 활용 및 뒷받침 등으로 젊은 후계인력들 영농의욕 고취 필요
- 후계인력들 자본 부족으로 비닐하우스, 선별장 등 영농시설 확충 여력이 부족하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과감한 정책지원 필요
- 대일수출 여름딸기 재배 후계인력 사례.

○ 수출 선도농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조건 완화

- 선도농에 대해 농협의 자금지원은 이자율 8~9%의 상호금융자금 밖에 없어 지원에 제약이 있음.
- 수출 선도농들의 자금수요에 정부의 장기저리자금과 상환기간 연장 필요: 3년거치 7년분할상환 ⇒ 3년거치 20년분할 상환

○ 비닐온실 시설설치 부담경감 위해 “정부 시설설치-농가임대” 필요

- 비닐온실 설치에 평당 20만원 이상 부담이 크므로 정부에서 필요한 경우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방식 긍정 검토 요망

○ 농업 행정, 조합의 순환근무체제로 전문성 저하

- 일선 행정과 농협에서 1~2년 단기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대농가 지도에 전문성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 원인.

○ 생태농업, 경관작물 지원 확대 필요

- 미래에는 고품격 전원생활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촌의 생태농업, 경관유지를 위한 작물 재배 등에 지원 필요

- 중부 이상 지역은 경관작물재배가 1기작에 그쳐 단위면적당 소득이 2기작을 하는 중부 이남보다 낮아 재배권장에 한계. 지역에 따라 단위면적당 보조 차등화 실시 필요

○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유통, 생산 참여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

- 대형유통업체가 M&A 등으로 초대형화되면서 산지 출하조직에 대해 품질, 안전성, 가격 등 요구 사항이 더 까다로워지고 많아짐.
- 출하조직 입장에서는 대형점에 입점하기 위해 요구하는 가격에 맞춰줘야 하는 실정이므로 가격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통보 수준임. 산지유통에 난다는 재주가 있어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.
- 최근 대형유통업체는 모 업체 사례와 같이 산지에 유명한 영농회사 법인을 벤더로 선정하여 산지를 간접적으로 장악하는 횡포를 부리는 형국임.
- 기업체가 직접 산지유통과 생산까지 참여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식품기업체와 생산자조직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우대함으로써 농가와 생산자조직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- 일례로 농업농촌기본법 상 우대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‘농산물유통시설’을 ‘농산물 유통가공시설’로 개정보완하여 산지 생산자조직 보호 필요

○ 소량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조속 설정 운영

- 파세리, 여름딸기 등 소량 품목, 신품종 등은 등록 농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동종 최고 잔류기준 적용 비일비재, 농가 책임
- 신품종 도입 종자업체에서 종자 도입 시 농약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. 업체가 그럴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와 농협, 업체가 공동 협조로 농약 등록 신속 추진
- 농진청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강화 필요

○ 학교급식 무인검수시스템 조속 도입 및 학교별 매뉴얼화 필요

- 현재 학교급식 검수 방식이 조리사 출근 검수로 되어 있어 급식공급 차량의 운영효율이 극히 낮음(차량 1대가 아침에 3개 학교 밖에 남

품 못함).

- 따라서 학교급식 무인검수시스템 실시로 배송물류 혁신 유도
- 또한 채소류 절단 크기 등 학교별로 급식원료 구입기준을 매뉴얼화 하여 표준화 필요

○ 도시조합과 산지조합의 연계 문제

- 도시조합의 넘쳐나는 자금의 산지 활용, 투자를 엮어내기 위해 산지 조합과 엮는 과제 실현 필요

○ 지자체 소유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과잉투자 우려

-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보조로 지자체 소유 산지유통시설을 ‘일단 설치하고 위탁하자’는 사고방식으로 과잉시설 우려
- 참여조합도 자부담을 하여 시설 운영을 먼저 고려한 시설 설치 유도
로 과잉시설, 이용율 저하 등 문제 해결 필요

○ 기타

- 농협의 농협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필요
- 한-호주 FTA 시 감자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 문제 신중 검토
- 도시조합 자본금의 조합공동사업법인 투자(출자) 유치 필요